

다산포럼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초록교육연대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리포트(World Happiness Report) 2022'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상위 20개국 중 15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훨씬 상회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세계적인 K팝 그룹 BTS는 물론 아카데미상 영화 '기생충'과 에미상을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문화 강국인데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행하게 살까?

이는 한국 정치가 사익을 추구하는 지나친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소선거구제, 대통령 중심제 정치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세계 정상의 행복 국가들은 대부분 극한 대결 대신 소수 의견까지 존중하는 북유럽에 위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전 사표를 줄이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국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여럿 있고, 믿음직한 정부와 투명 경영으로 유지되는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과 개인적 자유가 잘 보장되는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하라

서'에서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로 부패, 무관용, 취약한 사회적 지원, 낮은 자율성을 꼽았다. 물론 이는 좌우 정치적 갈등이 불씨가 된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 취업난, 불안한 노후, 높은 집값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오로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해 온 탓에 초래된 것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대통령제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한국 사회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된다. 독일은 비례대표 명단을 16개 주별로 작성해 어느 주든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선거 결과와 안 나온다. 따라서 득표율대로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 지역 일당 지배 체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다수당도 과반수를 넘기 어려워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해야 효율적이고 안정된 정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미국의 지지를 받던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 세계에 유례 없는 총통제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다. 4·19혁명 직후 잠시 내각제를 실시했지만 내각제로 혼란한 정국을 구실로 삼아 쿠데타로 장기 집권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잘못된 홍보를 해서인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내각제를 채택해도 한국에서는 좌파나 우파 모두 대통령제를 유일무이한 제도로 숭배해 왔다.

한국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하면 일본만 떠올리는데 이미 우리 국민의 의식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화 정치 경험을 통해 매우 역동적이어서 결코 일본처럼 일당 장기 집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식·영국식 내각제도 있는데 우리나라엔 국왕 제도가 없으므로 독일식이 더 가까울 것이다. 독일 내각제엔 대통령이 있지만 명예직이고 실권은 모두 총리가

행사한다. 요즘 한국처럼 국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행사해 정치 경합이 거의 없는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세계적 가십거리가 되는 해괴한 일은 독일식 내각제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온 국민과 정당들이 서로 장기간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정 현안을 결정하므로 혼란스럽지도 않다.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제도 확정 시한을 앞두고 각 당과 의원들이 서로 논치만 보고 있다가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오자 개혁 성향이 강한 초선 의원 모임이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지금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안 돼 300석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힘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의원수 증원을 막고 대구·경북 지역을 씩씩이하기 쉬운 최악의 소선거구제만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두세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도 거대 정당이 나눠 가지거나 영호남에서는 한 당이 다 독식해버리기 때문에 선거 제도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위성 정당법을 내리고 독일식 다당제 연정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 망언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총선 지형이 유리해지자 당론을 발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무려 180석까지 갔던 의원 수도 파벌 싸움에 매몰돼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했다.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수 의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명동 선언으로 위성 정당법도 내리고 의원 총회를 열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식 극한 대립으로 인한 이 불행한 세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월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더 극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면 '입을 위한 행진곡'도 분명 부를 것이다. 마치 엄청난 시대적 사명을 가진 대단한 인간인 마냥.

문득 '투사회보'의 막내, 사진작가 김항득 선생님이 생각한다. 작년 5월 한 전시회에서 보였을 때 자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소년 빨갱이였지. 소년 빨갱이." 아직도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 단어의 강렬함에서 오는 충격보다, 한평생 오월의 상처가 여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다. 비단 김항득 선생님만 그 상처 속에서 쓰라림을 느끼고 있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이웃 중 여러 사람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그날의 기억 속에서.

망월동을 찾아올 모든 정치인도 푸듯한 청춘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 정의를 열망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니,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데 이바지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뻔뻔하고 추잡한, 마냥 연극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만 한다. 부디 부탁한다. 오월을 당산들의 연극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 길으로 민주주의, 오월 정신이며, 자유여 외쳐대는 그러한 연극은 그만 멈춰달라. 속으로는 제 이속만 차리고 있는데, 그러한 연극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바로 오월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얼마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광주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를 예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오월 단체는 전야제 진행 차질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했다. 물론 전야제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오월 광주를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오월 정신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그제 바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모든 이들이 흘린 피를 헹궈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아울러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꿈꿨던 '대동 세상'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정치인들은 만인을 위해 싸우고 일해 달라. 만인을 위해 피 흘려 싸우고 있지 않은데, 어찌 오월 정신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겠는가. 제발 뻔하디 뻔한 시나리오의 연극을 멈춰 달라. 기록된 정취를 위한 투쟁이 아닌,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해 주길 부탁한다. 그제 바로 오월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길이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절히 외쳐 본다. '대동 세상'이 실현되는 일말의 희망을 꿈꾸며 말이다.

에너지 민주화 '분산 에너지 특별법'으로부터

을 넘어서기 직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과 마을에는 크고 작은 애로 사항들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요 비용이 적지 않았다. 주변 규제에 인한 제한과 땅 값 하락 등으로 주민들에게 깊은 근심을 안겨주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송문을 트일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으로, 주로 해안가 등에 들어서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망을 통해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전력의 단가는 똑같이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만 혜택을 본다는 등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산 중턱 곳곳에 높은 송전탑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의식이 변하면서 환경·건강·재산·권리 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송전선로 건설로 크나큰 아픔을 겪었던 '밀양' 지역의 갈등과 똑같은 갈등들이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똑같이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분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민주화'를 이루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시행으로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 요금 책정의 기준은 전기 생산지와 전기 수요지 거리가 아닌 '용도'에 따라서만 구분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송전 거리별 '거리 정산 요금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나가는 사회로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분산 에너지와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댈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역 사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제도와 발맞추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을 함께 발굴하여 실효성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社說

개막 한 달 광주비엔날레 흥행 부진 대책 없나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 7~7월 9일)가 개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초반 흥행 부진으로 좀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는 등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구태의연한 운영과 마케팅 부족 등으로 예전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개막한 올해 비엔날레에 한 달간 다녀간 관람객은 13만 여명 정도 집계됐다. 하지만 이전의 비엔날레들과 비교해 올해는 전시장에 활기가 떨어지는 등 침체된 분위기라는 평가 지배적이다. 통계상으로는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제 미술 행사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관람객이 학생들의 단체 관람인데다 외국인 관람객은 개막 초기 재단 초

점으로 방문한 외국 언론인과 큐레이터들 이외에는 구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일 개막 이후 12일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조만간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된다.

사실 이 같은 흥행 부진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광주시와 비엔날레 봄 업을 이유로 개막 직전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해 제작한 홍보 영상이 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역효과를 불러왔고 김건희 여사 개막식 초청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작 메인 콘텐츠인 전시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막을 두 달 앞둔 비엔날레가 흥행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전국 23개 여행사가 판매하고 있는 비엔날레 패키지의 콘텐츠를 보강해 대중의 흥미를 끌어모으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들을 유입시키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집단 성폭행까지...사실로 확인된 5·18 국가 폭력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그동안 제기된 모두 51건의 계엄군 성폭력 사건 가운데 그 때까지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직권 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 자료에서 선정한 26건을 합한 것이다. 나머지 여덟 건은 피해자들이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24건 중 성폭행 피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일곱 건에 달했고, 집단 성폭행도 최소 두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극악무도한 만행 그 자체였다. 여고생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 19일 두 세 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백운동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성

폭행당했다. 여고 3학년이었던 B양도 같은 날 숲속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외곽 길거리에 버려졌다. 이후 B양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성폭행을 당한 뒤 40년 이상 나주·대구의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피해 여성도 확인됐다.

계엄군들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실명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까지 들이대며 반인도적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 공소 시효를 떠나 엄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대한 치유 대책과 명예 회복 등 구제 절차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중국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수많은 장수와 지략가들이 포진하여 흥미로움을 더한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여포, 항우 등 고대 역사상 드물게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한다. 삼국지의 영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노장' (老將) 황충이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전장을 누볐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혼을 아끼지 않았던 최고의 장수로 꼽힌다. 비단 황충뿐만 아니라 조자룡, 황개, 엄안 등도 삼국지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노장' 들이다.

노장의 결단

나이 든 장수들이라면 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백전노장'들의 지혜가 없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 법이다. 일신의 편안함이나 권력욕을 위한 잔꾀보다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지략과 용기로 무장, 위기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며 진영의 역량을 결집,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진정한 배태량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 9단'으로 평가받는 박지철 전 국정원장은 1942년생으로 그야말로 정치권

그런 그가 최근 해남·진도·완도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장의 고향이 진도라는 점에서 차기 총선에서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였던 목포 출마설과 함께 비례 대표로 진출,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 민주당이 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출마의 기쁨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말을 아끼고 있는 노장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uim@

청춘 특목



안충원 전남대학교 2학년

화사한 빛깔 향에 취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녹음이 짙어가기 시작한다. 따사한 아니, 뜨거운 햇빛 그 중간을 느낄 수 있는 계절, 오월이 왔다. 누군가는 캠퍼스의 낭만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월의 향긋함을 즐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가슴을 옥죄는 통증 속에서, 달력 속 오월을 지우고자 할지도 모른다.

항상 그래 왔듯 망월동에는 수많은 이들이 봄빛 것이다. 43년 전 아픔을 기억하고 어루만지기 위해서.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있다. 바로 정당 불문 모든 정치인이다. 그들은 하나의 '연극'을 보여 줄 것이다. 단적으로 우르르 물러와 현화하고 비석을 닦으며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 "광주 정신 기억하고 계승하겠다. 민생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연극에 좀

기고



장은영 전라남도 의원

농어촌 주민들은 머리에 송전탑을 이고 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길 닿는 곳곳에 송전탑이 보인다. 거미줄처럼 늘어선 송전 선로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지난 2021년 형성되어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민들의 시름과 고민은 날로 늘어나는 시점에 지난 3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을 의결시키며 입법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장 '지역별 전기 요금 등'의 제45조(지역별 전기 요금)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화의 문턱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